

IFS 국가 정책 제언 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방안 (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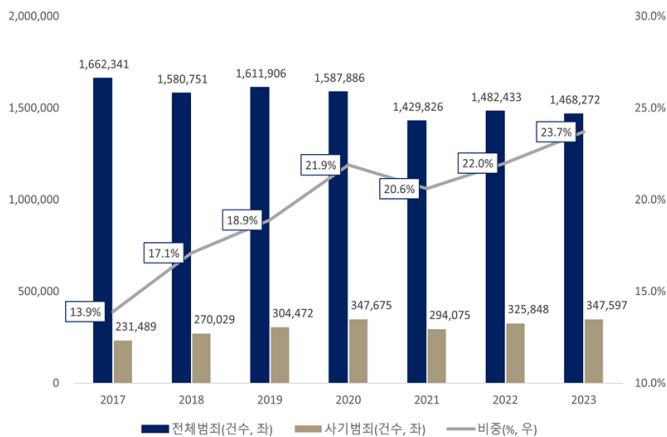
1

다중피해 사기범죄 현황

사기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 사기범죄는 금전피해 뿐 아니라 정서적 상실감으로 인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자본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중대범죄임
-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금융사기(cyber-enabled financial fraud)와 같은 비대면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전체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7년 13.9% → 23년 23.7%), 검거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17년 79.5% → 23년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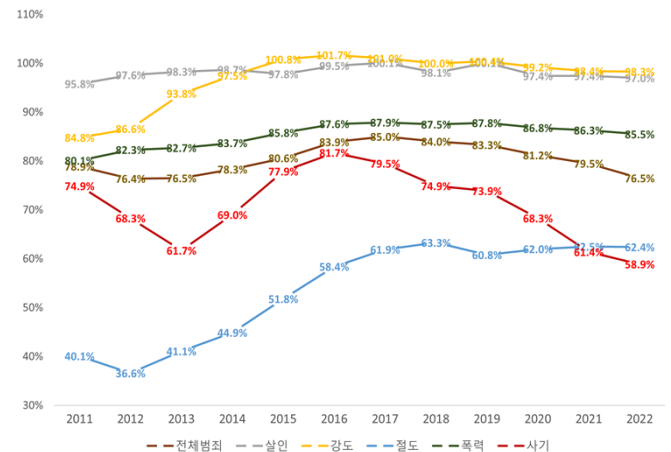
사기범죄 발생율 변화



다중피해 사기의 위험성 증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투자리딩방사기, 연애빙자사기, 스미싱 같은 대부분의 다중피해사기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물색함
- 국외에서 걸려온 전화 또는 보내는 메시지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유심을 사용하며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더욱 선호하는 추세
- 최근 5년간 수신된 전체 스팸 문자, 전화는 2019년 25.6억 건에서 2023년 54.1억 건으로 5년간 약 110% 증가

사기범죄 검거율 변화



2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불특정성

- 최근 통신 및 금융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대면성, 익명성 증가로 인해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 대상 신종 사기 범죄 증가
- 특히, 인지능력이 약화되는 고령층이나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특정 취약 계층들(소위 'Easy Target')은 더 큰 사기범죄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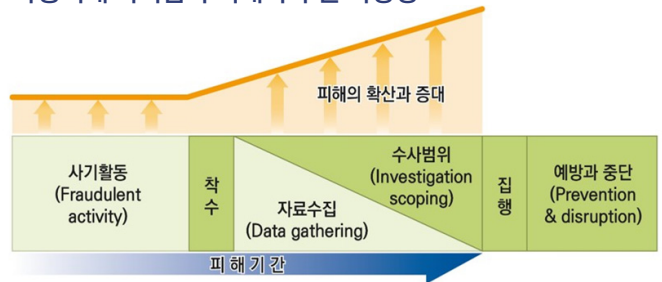
조직 범죄성 및 국제 범죄성

- 다중피해 사기조직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역할에만 집중하게 하고, 조직 전체의 구조나 다른 구성원들이 역할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게 하여 조직의 비밀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구조임
- 다중피해 사기범죄는 행위지와 결과 발생지가 일치하지 않는 초국경 범죄의 양상을 보임. 해외에 기반을 둔 센터를 통해 기망의 전화를 다량으로 송출하고 미끼문자의 다량 전송이 이루어지게 하며, 범행완료 후 피해금은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신속한 자금세탁을 통해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예방과 검거, 피해회복에 있어 여러 나라 간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피해의 무한 확장성

- 범행의 복잡성 및 수법의 다양성으로 인해 수사가 어렵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도주 및 수사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계속 양산하는 경우가 많음
- 추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 금융, 온라인 매체 등을 차단하는 선제적인 임시 조치들이 필요
- 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한 예·경보의 발령도 필요
-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사기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의 무한 확장성



출처: Betts 2017¹⁾

1) Betts, M. J. 2017. *Investigation of Fraud and Economic Cri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 국가별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 전략

영국

- 다양한 사기 신고를 통합 접수하는 전담 기관인 ‘액션 프로드(Action Fraud)’와 접수된 사기 관련 정보를 평가, 분석하는 ‘사기정보 분석국(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창설
- 2024년 10월부터 범죄자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빠져 스스로 송금을 승인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은행과 결제기관들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그 피해 금액을 환급해주는 ‘의무환급제도(Mandatory Reimbursement Framework)’ 시행

싱가폴

- 2019년 ‘사기방지센터 (Anti-Scam Centre, ASC)’ 설립
- ASC의 신속한 대응 시스템과 유관 기관 간 원활한 협력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사기 총피해 금액이 최초로 -1.3%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범죄 피해금 회복률 또한 ASC 설립 이전 3%에서 설립 이후 25%로 8배 가까이 증가



중국

- 2022년 「전기통신네트워크사기방지법」을 제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의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각종 행정적 규제 장치들을 통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사기 발생을 차단하고자 함
- ‘국가사기방지(반사)센터(国家反诈中心)’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수법과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대만

- 2004년 ‘165 사기방지센터’를 설립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2024년 「사기위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사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화된 처벌 규정과 국제 협력 조항을 통해 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음. 또한,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기 전화번호 차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



4 통합대응 전략 및 방향

범죄예방 및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

- 다중피해 사기는 그 특성상 경찰의 독자적인 범죄예방 활동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선제적인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범행 이후에도 전통적인 경찰 수사기법만으로는 신속하게 용의자를 식별하여 검거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님
-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에도 다중피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자금세탁 등을 통해 이미 철저히 은닉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함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종합적 분석 필요

- 최근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유형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에서 전자상거래 사기, 로맨스 사기, 투자 사기, 무역 사기 등 산업 전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통신과 금융, 온라인 플랫폼, 인터넷 등과 연계되어 더욱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험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다중피해 사기분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 구축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유형 분석을 통하여,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기업들(통신·금융·신용정보·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된 통합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경 범죄임을 감안할 때, 국가 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신고와 조치의 통합모델 구축

- 영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 '통합 사기범죄 대응센터'를 통해 신고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짐
-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대응이 신속한 조치(적시성)를 요구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과 청사진 제시는 2부로 이어짐)

